

##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철회가 올바른 조선산업 정책” 정몽준 특혜매각분쇄 결의대회 ... “현중지부·대우조선지회 연대해야 구조조정 막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지회가 함께 연대투쟁해야 정몽준 재벌 특혜 매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신상기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이 6월 9일 오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연 ‘현대중공



업 재벌 특혜 중단,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우조선 매각은 불공정을 넘어 정씨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매각이다” 라고 규탄했다.

신상기 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대우조선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죽이려 들고 있다. 이 정부 재벌 정책을 노동자들이 막아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지회 노동자들은 연대투쟁으로 불공정 매각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정몽준 자본이 의도대로 매각절차를 마치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겠다고 일방 발표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쟁당사자 여섯 개 나라가 합병을 승인

해야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유럽과 일본은 승인하지 않고 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동안 몇 나라에서 억지로 승인을 받아냈고, 정작 중요한 유럽과 일본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라고 질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이 EU집행위원회에 LNG 선박 수주를 줄이거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보다 급이 낮은 중소 조선소로 LNG 선박을 넘기는 한심한 방안을 제출했다” 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정부는 현중·대우조선 합병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조선소를 만들면 수주단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조선산업 정책을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EU집행위가 내리는 어떠한 조건의 합병 승인도

거부한다” 라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 특혜 대우조선 매각을 중단하는 게 가장 올바른 조선산업 정책이다” 라고 강조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경남지부와 대우조선지회는 현재보다 더 높은 강

도와 수위로 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다” 라면서, “경남지부는 금속노조의 정책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거제시민과 경남도민을 모으겠다. 이 투쟁의 정당성을 만들어 내겠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결의대회 참가 대표자들은 ‘경제파탄 민생파탄 주동자 문재인’, ‘불공정 편법승계 주동자 정몽준’, ‘조선산업 말살 주동자 산업은행 이동걸’ 등 대우조선 재벌 특혜 매각과 관련 있는 자들의 상징물을 부수고, 산업통상자원부 앞까지 행진했다.

지난 5월 노조 대우조선지회가 거제시민대책위와 거제시민 11만 명이 참여한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서명부’ 를 공정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경상남도 등에 전달했지만 아무 곳도 응답이 없다.

# 중소영세·무노조·이주노동자 백신휴가 차별·무대책

노조, 차별 없는 유급 백신휴가 제도 요구 ... 강제 연차소진, 무급휴가, 연월차 휴가 전 날 집중 강요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 산업단지 중소·영세 사업장과 무노조 사업장, 이주노동자의 감염병 백신 접종 유급휴가 보장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6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사업주들이 백신을 맞으려는 노동자에게 강제 연차소진, 무급휴가, 연월차 휴가 전 날 집중, 금요일 집중 강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부 사업주가 부당하게

휴가를 적용하고, 적반하장으로 주휴와 연차를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사업주의 횡포조차 당하지 못하는 무대책의 사업장이 대부분이고, 이주노동자는 아파도 병원조차 갈 수 없는 강제 노동상태나 마찬가지로 지적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에 ▲산업단지 중소 영세사업장 모든 노동자 코로나 19 백신 유급휴가 제도 보장·지원대원 수립 ▲백신 접종일 1일이

상, 집중 다음 날 1일, 증상 지속 근무 불가 시 요양기간 전체 유급휴가 ▲2회 집중 백신 경우 2회 모두 유급휴가 ▲이주노동자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이주노동자 접종 방법·과정·이상 반응 등 통·번역 안내 ▲사업장 백신 휴가 사내하청·비정규직·파견직·특수고용직·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 차별 없이 적용 보장 등을 촉구했다.

## 포항 네이처이엔티, 중대재해 은폐 시도

폐기물 소각로 정비 중 한 명 사망, 두 명 심각한 화상 ... 책임자 처벌, 특별근로감독 등 요구

포항 철강공단 폐기물처리업체인 네이처이엔티 노동자 세 명이 6월 5일 소각로 정비 작업 중 중화상을 입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사측이 중대재해를 숨기려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중대재해로 두 명의 노동자가 3도, 2도 화상을 입었고, 한 명은 8일 저녁 숨졌다.

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재해자 가족들에게 사고에 대한 설명을 일체 하지 않은 채 병원에서 가족의 동향을 살피고, 사고 발생 사흘째인 6월 7일 가족의 동의도 없이 중환자실에 몰래 들어가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노조 포항지부는 6월 7일 오후 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네이처이엔티 노동자 세 명 화상사고, 중대재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눈으로 봐도 석 달 이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중대재해인데 사측은 하루가 지나도록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규탄했다.

네이처이엔티가 보고하지 않아 노조 포항지부가 포항지청에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노동부는 해당업체가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 작업중지와 사고조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노조 포항지부는 “사고 후 사측은 사고현장을 훼손했고, 노동부는 금속노조의 강력한 항의로 사고발생 다음날 현장에 들어갔다”라고 지적했다.

사측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고 소각로와 같은 다른 소각로를 가동했다. 지부는 “같은 설비에서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측과 노

동부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 포항지부는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회사와 관리·감독기관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태에 재해자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노조 포항지부는 네이처이엔티에 ▲책임자 처벌·직접 사과 ▲치료기간 치료비와 임금 지급 ▲노조와 재발방지 대책 논의·위험성 평가 시행을 요구했다.

지부는 노동부 포항지청에 ▲네이처이엔티 대표이사 처벌 ▲중대재해 신고 즉시 조치 미시행 포항지청장 사과 ▲금속노조와 특별근로감독·안전보건진단 시행 등을 요구했다.